

ICT 대연합 토론회 발언 요지

성균관대학교 정태명

새로운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챙기겠다고 한다. 국민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겠다는 공약은 누구나 환영할만하다. 불을 지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할 수 있다는 숨겨져 있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즉, 민생과 공약은 경제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성장동력이 될 수단이 필요하다.

다행히 오늘 윤창번박사께서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ICT 공약은 산업성장과 소비자 중심의 ICT 발전을 기대할 만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어 다행이다. 특히, SW와 콘텐츠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공언과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ICT 서비스와 지능적인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대목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현재의 ICT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CPND가 분산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가당치 않은 공약이다. ICT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ICT 전담부처 설립을 약속했다. 때문에 우리는 왜 ICT 전담부처가 필요한가의 논의보다는 “새로이 태어날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ICT 전담부처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성장동력으로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민생과 복지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본다.

1. 융합산업을 위한 ICT 기반의 조성 및 지원
2.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를 통한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
3. 정보보호 등 건전하고 건강한 ICT 기반의 생활 환경과 문화 조성
4. ICT 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의 정립
5.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인 민생과 복지 실현의 도구로 ICT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ICT 전담부처는 CPND 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부처가 나름의 콘텐츠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기, 자동차, 조선, 전력 기기 등의 디바이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모든 부처에 제공해야한다. 콘텐츠와 단말기는 단일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부처에서 발전시켜야 하며, ICT 담당 부처는 표준, 코어 기술, 발전 정책 등을 만들어 각 부처를 지원하는 Supporting ministry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네트워크와 플랫폼도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과 인프라를 모든 산업에 제공되어야 한다. 융합산업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능이 융합산업으로 완성되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CT는 박근혜대통령이 지향하는 민생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대의 공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연합하는 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ICT 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미래를 다지는 과학을 교육이라는 현안과 경쟁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모쪼록 박근혜후보의 공약이 박근혜정부에서 현실이 되어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